

민주, 이태원 국조 이어 '이상민 해임' 쟁기... 주도권 잡기

정부 책임 강조...11월29일 시한 제시 "응당한 입장, 결과 없으면 대응" 예고 해임건의, 탄핵소추 열어 놓고 고려中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개시 이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 책임론 공세 수위를 강화하면서 이태원 참사 한달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선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태원 국정조사 예비조사 기간 첫 공적 무기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 장관 해임 또는 자진 사퇴 시한을 11월 28일로 정하고 이후 강경 대응을 시사한 것이다.

국정조사를 관철시킨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외 공세 고삐를 죄는 선봉에 섰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국민은 참사 법적 책임은 물론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질 핵심 인사로 이 장관을 지목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파면에 관한 분명한 조치를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또 "대통령이 당연히 파면시킬 줄 알았고 스스로 사퇴할 줄 알았다", "최소한 일말의 양심, 책임감이 있다면 물러나겠지 하고 기다려 왔다"며 "그런데 참사 한 달이 되도록 일언반구가 없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책임지고 파면시키든, 물러나든 국회가 직접 책무를 다해 거취에 대해 물을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 또는 본인의 응당한 입장과 결과가 없다면 어떻게 대응할지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 추진 가능성을 모두 열어 두고 있다. 현재 의견이 분분한 상황으로 특정안에 중지가 모인 것은 아니지만, "해임건의안은 약하니 탄핵소추해야 한다", "탄핵소추는 법리적으로 가능하겠나" 등의 견해가 오가고 있다는 게 민주당 원내 관계자들 전언이다.

이 장관 해임은 이태원 참사 대응 국면 초기부터 민주당 측 주요 공세 포인트였다. 우선 '인력 배치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다'는 등 발언 지적과 함께 11월2일 이후 파면 주장이 본격 전개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이 장관 관련 각종 발언 논란 등이 맞물리면서 공세 수위가 강해졌다. 언론 인터뷰에서의 이른바 '폼 나게 사표' 발언, 책임 지적에 대한 '사고 수습이 먼저'라는 언급 등이 조영 받았다.



이 장관이 경찰국 신설이 논란이던 지난 6월엔 행안부의 경찰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과 권한을 긍정했으나, 참사 이후인 11월 국회에선 말을 바꿨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정조사 추진 과정에서 이 장관 책임론은 맞물려 움직였다. 이 장관 등에 대한 수사 단계는 파면 요구 근거인 동시에 특검 도입 주장 논리로 활용되기도 했다.

이 장관에 대한 공세는 윤 대통령을 향한

것으로도 일한다. 민주당 측은 윤 대통령과 이 장관 사이 학연, 윤 대통령이 이 장관 어깨를 두드린 장면 등을 부각해 비판한 바 있다.

이 장관 거취에 대한 통찰 역시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부가한 것이라 평가가 있다. 이 장관에 대한 조치를 거부할 소지가 적잖은 상황에서 일종의 압박이 될 수 있단 관측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공은 정부에게 있

다. 행동으로 어떤 것을 고를지는 최종적으로 할 때 고민하면 되는 문제"라며 "우선 파면 요구에 쉼표를 박은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원내 인사는 "박진 외교부 장관 때와는 좀 다르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겠나"라고 했고, 또 다른 원내 관계자는 "이 장관 책임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움찔하지 않았겠나"라고 평가했다.

최이슬기자

한춘옥 전남도의원, "여성농업인 혜택 연령대 상향하여 지급해야 한다" 지적

고령화되는 농촌 실정 맞춘 혜택 지급 요청



전 남 도 의 회 농 수 산 위 원 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최근 농축산식품국을 대상으로 한 2023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여성농업인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는 현재 75세까지 연 20만 원이 지원되고 있지만, 이는

실제 여성농업인의 60%밖에 되지 않는다"며 "최근 급격한 농촌 고령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나이 상승을 고려해 농촌 실정에 맞게 연령대를 상향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농업인은 지역사회에서 가사·돌봄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활동을 제공해 한 숨 쉬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복바우처를 점차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강화석 농축산식품국장은 "여성농업인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지원 범위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野 "尹정부, 이태원 유족 간 소통 의도적 차단...두려웠나"

"공무원, 유족 간 연락처 공유 안 되게 교육받아" "이제라도 유족 소통채널 열고 연락처 공유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의도적으로 유족 간의 소통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말도 안 되는 억지로 유족들의 연락을 막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유가족들에 따르면 정부가 유족 간 소통을 위한 연락처 공유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고 한다. 담당 공무원은 유족 간에 연락처가 공유되지 않게 하라는 교육까지 받았다고 한다"며 "심지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유가족 연대가 있어야만 연결해 줄 수 있다는

황당무계한 답변을 받은 유족도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유가족이 만나 소통하는 것이 두려워 사전에 차단한 것이나, 그저 유족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정부가 시키는 대로 지켜만 보라는 것이냐"며 "정부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진심 어린 사과를 바라는 유족들의 목소리를 막으려 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 "유가족이 연대해 협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는 누가 유족 간의 소통을 막는 방침을 정했고 지시했는지 밝히기 바란다"며 "지금이라도 유족 간

소통 채널을 열어주고 연락처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출근길 약속 기자회견이 중단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을 용산 시대의 상징처럼 강조했다. 국민과의 소통, 대통령실의 열린 자세를 상징하는 수단이었다"며 "수백, 수천억 원의 혈세를 들여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대체 왜 이전한 것이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언론관은 이미 우려 수준을 넘어섰다. 공개적으로 특정 언론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고 언론끼리 갈라치기를 하는 모습은 대통령직에 어울리는 일이 아니다"라며 "역대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언론이 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인식조차 못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김재환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